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노선 논란

순환형 조기착공 가능 남북형 도시발전 유리

오는 2019년 완공될 예정인 광주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노선이 순환형과 남북형 2개안으로 압축된 가운데 최종 노선 선정을 위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광주시가 기존 순환형의 대안으로 남북형 노선을 제시한데 대해 광주 서구와 광산지역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서는 등 진통이 빚어지고 있다.

광주시 “도심 수요 바뀌어 재조정 필요” 서구·광산 주민들 “왜 바꾸나...” 반발

순환형 노선=지난 2002년 교통부가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함에 따라 확정된 노선이다. 도심을 고려형으로 순환하는 것으로, 백운광장~남광주역~광주역~터미널~시청~상무역~백운광장~효천역을 잇는 27.4km 구간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34개소의 역이 신설된다.

본촌공업단지~첨단단지에 이르는 24.58km 구간으로 주요 대학을 모두 지나고 주변 도시와 연계 발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총 사업비는 1조69억원이 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지하철이 지상고가 방식으로 건설된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광주 1순환도로에 노선이 건설됨으로써 부지 매입에 따른 민원을 예방할 수 있고 비용도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백운광장과 광주역 구간의 경우 지하로 노선을 가설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 연장, 공사비 증가 등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 노선이 채택될 경우 상무지구, 금호지구 등 일부 지역민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주민들 왜 반발하나=광주 서구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광주도시철도 2호선 노선변경 반대 추진위원회’ 주창의 골자는 기존 순환형 노선의 채택이다. 남북형이 채택될 경우 역세권의 영향 등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반사이익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기존 순환선 대신 남북형을 제시한 것은 시민들의 의사나 광주의 장기적 도시발전 계획을 무시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다”며 “광주시는 광범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시철도 2호선의 남북형 안을 즉각 폐기하고 당초 계획대로 순환형 노선으로 결정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의 입장=현재까지 도시철도 노선이 2개 안으로 좁혀졌을 뿐 어느 쪽에도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전문가, 시민공청회를 통해 도출된 최적안을 채택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존 순환선에 대한 대안선으로 남북형 노선을 제시한 것은 어느 정도 남북형 노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기존 순환형 노선이 광주 첨단산단, 일곡

지구 등 새로운 도심환경에 대한 최적노선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2호선 기본계획 변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일부 전문가들도 광주시가 제시한 남북형 노선이 조선대, 광주대, 인성고 등 모두 14개 학교를 경유함으로써 학생 승객 수요 창출로 경제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 나주, 장성, 담양 등 인근 지역과 연계성을 확보하는 등 광주시의 교통 인프라 확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남북형 노선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로 꼽힌다.

韓電, 수상한 설문조사

나주 이전 찬반 문항 포함...저의 의구심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분사 이전이 확정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대상으로 이전 찬성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확정된 사안을 뒤늦게 설문조사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이전 작업의 추동력을 잃게 하거나 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24일 민주당 김재균(광주 북)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정장선) 소속 국회의원 25명을 상대로 ‘한국전력 경영현황에 대한 의견조사’라는 명목으로 15개 항목을 구성한 설문조사를 했다.

한전은 이 설문에서 구조조정, 발전소 통합, 요금체계 개선, 전기요금 인상, 지중화 중단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특히 한전은 12번 항목에서 ‘정부 방침에 따른 한전의 지방이전에 대한 의견은?’이라는 질문을 했고 답 항목으로는 ▲지방경제 활성화, 균형발전을 위해 적절하다 ▲이전을 해도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므로 불필요하다 ▲이전 여부는 해당 회사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등 3가지를 제시, 선택하도록 했다.

한전은 또 다음 항목의 질문에서 분사 이전시 종전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다. 이 같은 한전 분사 이전의 찬반을 묻는 질문에 대해 주승용, 김재균 의원 등 광주·전남 출신 지식경제위원들은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 이미 정부 방침으로 정해진 ‘분사 이전’의 찬반을 묻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영 현황을 묻는 설문조사라면 효율적인 분사 이전의 방법 또는 분사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가 실시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더욱이 답의 두 번째 항목 ‘이전을 해도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므로’라는 제시어도 이미 이전에 대한 경제효과가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전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한전 이전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팽배한 것으로 나올 경우 한전 분사 이전을 백지화하거나 다른 형태로 분사 이전을 사실상 무효화시키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지식경제위원회는 현재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14명, 민주당 소속 의원이 7명, 기타 4명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광주·전남 출신 의원은 두 명 뿐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한전 분사 이전이 더디게 진행돼 부지 매입 등 대책이 시급한데도 한전이 이 같이 뒷북치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며 “한전은 시급한 분사 이전을 위해 실행계획을 하루빨리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균 의원은 “한전 분사 이전이 더디게 진행돼 부지 매입 등 대책이 시급한데도 한전이 이 같이 뒷북치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며 “한전은 시급한 분사 이전을 위해 실행계획을 하루빨리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균 의원은 “한전 분사 이전이 더디게 진행돼 부지 매입 등 대책이 시급한데도 한전이 이 같이 뒷북치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며 “한전은 시급한 분사 이전을 위해 실행계획을 하루빨리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균 의원은 “한전 분사 이전이 더디게 진행돼 부지 매입 등 대책이 시급한데도 한전이 이 같이 뒷북치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며 “한전은 시급한 분사 이전을 위해 실행계획을 하루빨리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균 의원은 “한전 분사 이전이 더디게 진행돼 부지 매입 등 대책이 시급한데도 한전이 이 같이 뒷북치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며 “한전은 시급한 분사 이전을 위해 실행계획을 하루빨리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균 의원은 “한전 분사 이전이 더디게 진행돼 부지 매입 등 대책이 시급한데도 한전이 이 같이 뒷북치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며 “한전은 시급한 분사 이전을 위해 실행계획을 하루빨리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균 의원은 “한전 분사 이전이 더디게 진행돼 부지 매입 등 대책이 시급한데도 한전이 이 같이 뒷북치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며 “한전은 시급한 분사 이전을 위해 실행계획을 하루빨리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여금 반납·예산절감으로 일자리 나누기

자치단체·공기업 ‘잡 셰어링’ 확산

임금 및 상여금 반납과 예산절감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잡 셰어링(Job Sharing)’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서 확산하고 있다.

2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완도군은 김중식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650명이 최근 직급별로 10~30%의 성과 상여금을 반납해 2억2천만원(1인당 평균 36만원)의 일자리 나누기 사업비를 조성했다. 이 돈은 하루 3만8천원을 받는 일자리 5천700개에 쓰일 예정이다. 완도군은 이를 위해 ‘청해진 근로대학’을 세워 가사 도우미와 문화관광해설사 등 맞춤형교육을 할 계획이다. 상여금 반납을 통한 이번 일자리 창출 사업은 김중식 완도군수의 제안을 공무원노조가 받아들여면서 성사됐다.

광주시 지방투자기관인 한국광기술원 직원 156명도 지난해 성과상여금 6천만원을 반납해 청년 인턴 6명을 지난 10일 채용했다. 광기술원은 채용된 청년 인턴을 전공과 희망부서를 고려한 부서배치로 인턴 종료 후에도 관련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해 정부의 청년인턴 제도의 충실한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완도군과 한국광기술원 등과 같이 상여금 또는 복리후생비를 반납한 모두 42개에 이르고 있고, 인천시 등 14개 기관은 급여 1~5%를 때 일자리 창출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한, 광주시와 5개 구청 등 41개 기관은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약 3만4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시 지방투자기관인 한국광기술원 직원 156명도 지난해 성과상여금 6천만원을 반납해 청년 인턴 6명을 지난 10일 채용했다.

광주시 지방투자기관인 한국광기술원 직원 156명도 지난해 성과상여금 6천만원을 반납해 청년 인턴 6명을 지난 10일 채용했다.

광주시 지방투자기관인 한국광기술원 직원 156명도 지난해 성과상여금 6천만원을 반납해 청년 인턴 6명을 지난 10일 채용했다.

광주시 지방투자기관인 한국광기술원 직원 156명도 지난해 성과상여금 6천만원을 반납해 청년 인턴 6명을 지난 10일 채용했다.

광주시 지방투자기관인 한국광기술원 직원 156명도 지난해 성과상여금 6천만원을 반납해 청년 인턴 6명을 지난 10일 채용했다.

광주시 지방투자기관인 한국광기술원 직원 156명도 지난해 성과상여금 6천만원을 반납해 청년 인턴 6명을 지난 10일 채용했다.

광주시 지방투자기관인 한국광기술원 직원 156명도 지난해 성과상여금 6천만원을 반납해 청년 인턴 6명을 지난 10일 채용했다.

광주시 지방투자기관인 한국광기술원 직원 156명도 지난해 성과상여금 6천만원을 반납해 청년 인턴 6명을 지난 10일 채용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노선변경 반대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최근 ‘도시철도 노선 선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토론회’에서 ‘도시철도 2호선 원안대로 처리하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